

‘제보자 실명’ 논란... “단정적 표현” vs “조국 딸은 해놓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를 ‘단독범’으로 칭한 것에 대해 14일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쟁점은 제보자의 실명이 종합편성채널에서 먼저 공개된 상황에서 황 의원이 또 한번 실명을 거론한 것이 적절하지 여부와, 현씨를 ‘단독범’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부분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실명 공개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단독범’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실명은 이미 공개가 돼 있었던 걸로 들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면서 “제보자도 이름이 회자될 것을 감안하고 공개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명공개’와 ‘단독범’ 표현 두고 논란 실명공개는 대체로 문제 없다는 반응 다만 ‘단독범’ 표현 비판... “정말 별로” 일부 시민들은 황희 의견 동조하기도

다만 김씨는 “현직 의원이 단정적으로 범인이나 철부지나 비난한 것은 정말 별로인 것 같다”면서 “전문을 읽어봤는데, 아직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제보자가 잘못된 게 맞는 것 처럼 단정짓고 비난해놨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조모(30)씨도 “사실 실명만 넣었으면 이미 나온 것이라고 하니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단독범 운운한 것까지 보면 좀 그렇다”면서 “해명글도 봤는데 더 별로다. 단독범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입으로 단독범이라고 해놓고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건지, 자기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게 어이 없었다”면서 “일단 질러놓고 여론이 자기 생각과 달리 부정적이니까 자기 의도 아니었다고 하는 게 비겁하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황 의원의 ‘실명 공개’와 ‘단독범’ 표현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구로구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는 김모(여·50)씨는 “경찰이 제보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누구와 사전에 협의를 한 건지 휴대폰을 확보해야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의 ‘단독범’이 아닐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대학원생인 신모(42)씨는 “실명을 거론했다고 황 의원이 사과까지 했다

고 하는데, 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이름을 거론한 어떤 사람들도 사과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의 실명 거론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는 이날 오후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황 의원과 인터넷 상에서 제보자를 비방하는 네티즌들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 황희의 페이스북 글이 게시된 후 제보자를 비방하고 협박하는 글이 각종 SNS 상에서 난무하고 제보자는 그로 인해 ‘정신과 병원’이라고 가짜야 할 지경”이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집단 보복범죄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폭격”라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며 “그동안 이 사건을 키워온 000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000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썼다. 서선욱기자



마스크 쓰고 발차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14일 오후 광주 남구 한 태권도 학원이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련을 하고 있다.

광주, 부동산 불법거래 무더기 적발

44건 중 수사의뢰 3건·행정처분 25건·시정계도 16건

광주지역에서 부동산 불법거래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경찰청, 국세청, 자치구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 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4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단

속 5개반을 편성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업소 및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중개업소 89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적발 유형별로는 ▲등록증 대여혐의, 무등록 중개행위 등 3건 ▲실거래 신고와 거래계약서상 계약일 상이, 확인실명서 기재사항 또는 인장날인 누락 등 25건 ▲등록부와 간판의 사무

소명 상이, 자격증 원본 미제시 등 16건이다. 단속에서 적발한 44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수사의뢰 3건, 행정처분 25건, 시정계도 16건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민원발생 지역과 다문거래 의심 업소 및 신규아파트 분양사무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공조 등으로 불법적인 거래행위와 투기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통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를 정밀 조사해 8월 현재 143건 277명에게 과태료 13여원을 부과했다. 조인호기자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 모바일 방식없이 PC로만

교육부 “NEIS 연동해야 하는데 보안상 문제 있어”



교육부가 14일부터 한달여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다수 학교 등교가 중단됐으나 예년처럼 PC로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모바일 기기로는 불가능하다.

교육계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하는 만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16일까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국 학교에서 실시된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부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매년 2회 실시해 왔다. 통상 상반기에는 전수조사, 하반기에는 표본조사가 이뤄져 왔다.

지난해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는 초4부터 고3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실시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가 연기될 미뤄지면서 상·하반기 조사를 이번 에 함께 실시한다. 최이슬기자

대입을 목전에 둔 고3도 제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불법 촬영과 유괴 등 디지털 성폭력 피해 여부 등 학생들이 겪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4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놓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첫 조사다.

올해 초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겁박한 'n번방 사건'이 문제가 된 한편 경남에서는 교사들이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실이 적발된 티라 조사에 관심이 모인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에 서 받은 '2019년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에 따르면 학생 14만4472명 중 3.0%가 불법 촬영이나 유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도 학생들이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초·중·고교에서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밀집도 완화 조치와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최이슬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